

기회균등 개념의 적절성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양진석



기회균등 개념의 일반적 정의 업적주의(Meritocracy)

- ▶ 성별, 신분, 인종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균등 보장
- ▶ 재능(talent), 능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 ▶ 개인 노력(effort)에 따라 재능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 재능과 업적(merit)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
- ▶ 교육의 기회균등, 취업과 승진에서의 공정성
- ▶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귀족주의 잔재 청산에 기여
- ▶ 능력과 업적 차이에 근거한 불평등(inequality) 인정/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이
- ▶ 한국사회 일부 지도층 자제의 대학입시에서의 비리
- ▶ 일부 지도층 자제의 취업에서의 특혜

진보주의 기회균등 개념

- 미국의 급진적 자유주의자(high liberalism) 존 롤즈(John Rawls), 사회주의 경제학자 존 로머(John Romer)
- 업적주의 문제점 지적 : 능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업적주의는 형식적 기회균등 일 뿐이다
-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
- 재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동등한 환경을 저해하는 우연적 요소로서의 부모의 경제력 차이
-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고등 교육과 고수익 직장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유리하다
- 신분 상승(social mobility)을 저해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에게는 우연적 요소일 뿐이다

진보주의자의 실질적 기회균등 개념

- ▶ 재능과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effort)하는 마음가짐도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 가정환경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기인하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 실질적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고 가정환경의 영향력 제거
- ▶ 공립학교의 무상교육
- ▶ 상속세 강화와 증여의 제한
- ▶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 제공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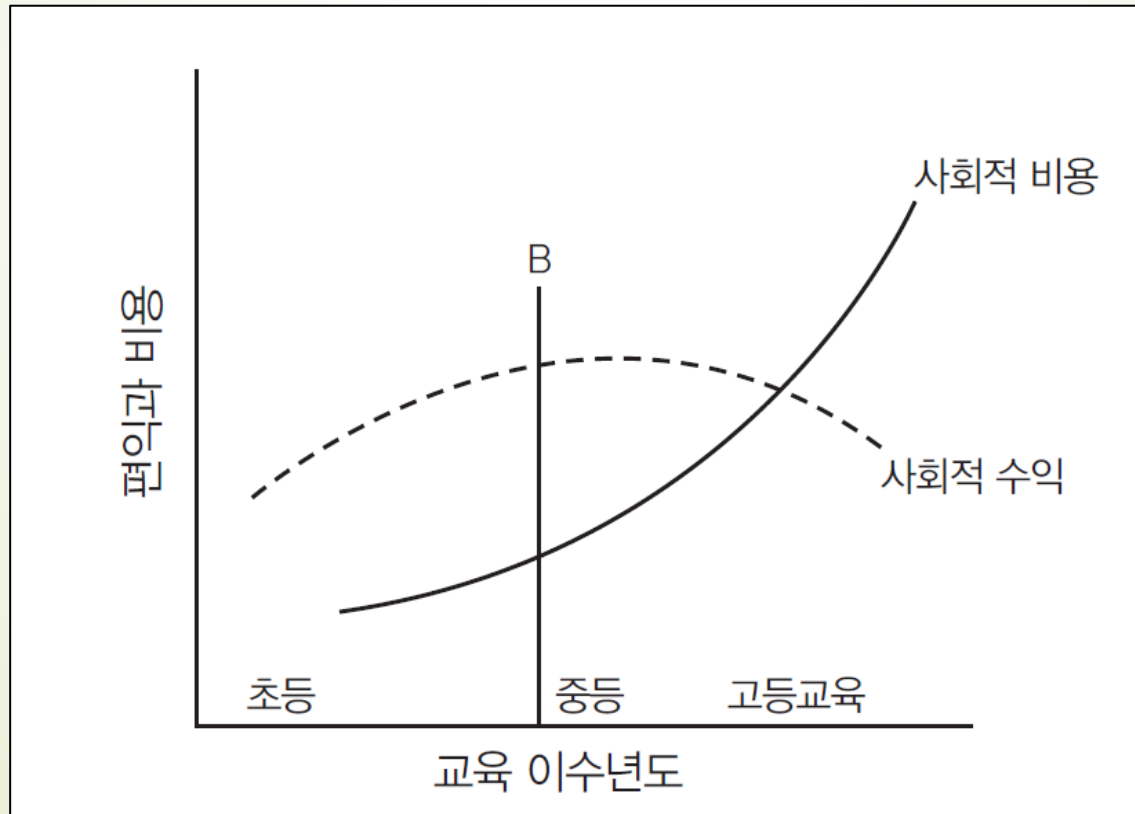
- ▶ 진보주의 기회균등 개념의 부적실성 (Joseph Fishkin, Harry Brighouse)
- ▶ 자본주의 사회가 제로섬(zero-sum) 사회인가?
- ▶ 고수익을 보장하는 전문직이나 추구하여야 할 가치 있는 일이 하나 뿐인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병목현상이 심하겠지만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병존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은 병목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II)

- ▶ 노력(effort)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정의 영향력을 받는가?
- ▶ 도덕적 책임감과 개인의 자율적 선택 능력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 불우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 ▶ 자녀의 교육 성과와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 ▶ 물론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출생지, 자녀의 수, 인종, 자녀의 성격과 협동심과 같은 비 인지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
- ▶ 가정환경(부모의 경제력)의 영향력을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III)

- ▶ B점 이후에는 사회적 비용(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규모)이 사회적 수익보다 큼
- ▶ 개발 도상국에서는 기회균등의 미명하에 지나친 고등교육 시설투자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발생 (Michael Todaro, 경제발전론)



한국 상황에의 적용(I) 고학력 실업자

- ▶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각종 부작용 초래
- ▶ 기회균등의 미명하에 고등교육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 ▶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 71.3%(2012년), OECD 평균(56%), 독일(36%), 일본(48%), 미국(64%)
- ▶ 이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의 부작용 초래
- ▶ 높은 청년 체감 실업률 22.4%
- ▶ 고학력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선호 현상으로 고학력 실업 문제 발생
- ▶ 저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인력난

한국 상황에의 적용(II) 반값등록금 문제

- ▶ 교육 기회균등을 위해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 ▶ 국가 장학금 예산 1조 9740억 (2012년), 3조 8778억(2016년)
- ▶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와 국가 장학금을 5조원 대로 확대 계획
- ▶ 유 진성의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민총생산 0.51% 하락과 고용률을 0.42% 감소시키는 부작용. 효율적 자원배분 저해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

한국상황에의 적용 (III) 특목고 폐지

- 현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귀족 학교로 규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시도
- 가정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교육 기회의 평준화 정책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정하여 가정의 자유(liberty)를 침해하는 정책
- 이러한 평준화 정책은 전반적 교육의 하향 평준화(levelling-down) 초래
- 울산시가 2000년에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 후에,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원 수가 오히려 증가 (배호순, '평준화 넘어 선진화')
현정부가 추진한 혁신학교의 결과, 학력 저하 현상 발생 (김용,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 정상인이던 본인이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고 모든 국민들을 수술하여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하향 평준화

한국상황에의 적용 (IV) 높은 상속, 증여세

- 기회균등의 미명하에 높은 상속, 증여세 부과의 부작용
- 높은 상속세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낭비적 소비만 증가
- 중소기업을 승계 받은 자녀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소규모 가족기업을 매각하여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야 함. 상속을 받을 때 과세하지 말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에 유상으로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